# "민주대장정 통해 MB독재 심판할 것"

## 민주당 19일 광주·전남, 28일 서울 등 전국 순회 투쟁 돌입

### 박지원, 대통령 사과·이상득 의원 사퇴 요구

민주당이 14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서 '날치기 무효화'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의 무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처리 과정에서 서민 복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되고 이상득 의원 등 소위 정권 실세들의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에서 '이명박 독재 심판 인천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새벽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천막농성을 진행했던 민주당은 인천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대전·충남(15일), 부산·울산(16일), 전북(17일), 경남(18일), 광주·전남(19일), 대구·경북(22일), 서울(28일) 등 전국을 돌면서 순회 투쟁을 벌인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날치기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들려줌으로써 이명박 독재 진상에 대해 국민적 동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제 민주대장정을 통해 이명박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을 날치기한 뒤 자축연을 벌였다는 한나라당 의원 5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득 의원,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어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이상득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물러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새해 '형님예산'은 16개 사업, 총 3665억원으로, 당초 2216억원이었다가 날치기 과정에서 1449억원이 증액됐다"며 "현 정권 출범 후 '형님예산'의 총사업비 규모는 10조1396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또한,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 "최소 120개 사업에서 2조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장외투쟁에 나섰을 당시 내부 동력 확보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 및 서민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예상외로 높아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탄력이 붙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4일 오후 인천 주안역광장에서 열린 민주당의 '이명박 독재 심판 인천 결의대회'에서 손학규 대표 등 당직자와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원내대표 이상 날치기 책임져야"

## 한나라 예산 후폭풍 '지도부 인책론' 확산

예산안 단독 처리 후폭풍으로 당내 파열음이 일고 있는 한나라당에 지도부 인책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 나아가 안상수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시하며 추가 인책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 재편론'을 주장한 홍준표 최고위원은 14일 "지금 수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땜질 처방으로는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근본적 처방을 거듭 강조했다.

이한구 의원도 이날 "예산처리의 책임자는 원내대표지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같이 터져 나온다면 책임질 사람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며 원내대표 이상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예산 후폭풍 처리에 안상수 지도부의 지도력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보온병 논란'도 있었던 만큼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안 대표 퇴진론'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 지역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파동으로 '카운터 펀치'를 맞은 셈"이라고 지역 민심을 전했고, 다른 초선 의원은 "지금은 휘발유가 깔려있는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예산안 단독 날치기 처리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한 것으로 알려진다.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었다"는 응답이 59.7%에 달한 반면 "불가피했다"는 응답은 29.2%에 그쳤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50.2%로, "야당 쪽 책임"이라고 답한 32.6%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내분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기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안상수 체제에 대한 비판론이 중도사퇴론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 것이다.

이와 관련, 안상수 대표는 이날 "더 이상의 당·정 문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당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원희룡 사무총장도 지도부 총사퇴론에 대해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이러고 있느냐"며 "안상수 대표도 이번처럼 빨리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안 대표를 변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한구 "총선·레임덕 위기 절실히 느껴"

## "국민들, 실세 지역구 예산챙기기에 분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4일 예산안 날치기 처리와 관련, "2012년 총선 참패와 이명박 정부 레임덕이라는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나라당 요구예산이 누락됐기 때문이 아니라 설익은 예산의 변칙처리, 실세 지역구에 토목예산을 챙기는 내용으로 예산이 처리됐다는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형님예산 논란에 대해서도 "대구·경북 지역이 경제가 나빠서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 있는 대구·경북 시민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라 전체 균형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묘하다. 상당히 떨떠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거수기 전락 비판에 대해 "국회의 권위를 세워주는 데 아주 중요한 데가 여당이다. 여당이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3권분립 정신에 위반되고 민주주의 하는데 제대로 못하면 존재가치가 떨어진다"며 "그래서 당은 당대로 국민 여론 수렴하고 국회의원 당원 의견 조정해서 행정부와 조율 동등한 입장에서 조율하도록 하는 기본 자세를 가져야 행정부도 건전하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대해 "예산처리 책임자는 원내대표"라며 김무성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황의돈 육참총장 사임

## 軍 인사폭 커질 듯

황의돈 육군참모총장(대장)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책임을 지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황 총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해 신임 장관과 함께 육군개혁을 선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육군을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대통령께 사임을 건의드렸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 업무는 당분간 조종환 참모차장이 대행하게 되며 김상기 제3야전군사령관(대장·육사 32기)과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대장·육사 32기), 박정이 제1야전군사령관(대장·육사 32기), 이철휘 제2작전사령관(대장·학군 13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민구 합참의장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상부에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참모총장의 전역지원서 제출로 15일로 예정된 군 장성 인사가 다소 늦어지고 인사폭도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15일에 장성 진급인사(대령→준장)를 하고 이어서 소장, 중장 인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육군총장의 전역지원서 제출로 장성 진급인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게 됐고"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유시민 광주서 2차례 특강… 시민사회 인사 회동도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15일 광주를 방문해 2차례의 강연에 이어 시민사회 인사를 잇따라 만난다.

유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총회 초청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육아·보육 복지정책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유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지난달 9일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참여정책연구원의 개원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던 '육아 수당 도입과 보육서비스 혁신'의 내용과 당시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국민참여당의 육아·보육정책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유 원장은 이어 오후 5시 조선대학교 전자공대 IT홀에서 조선대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국민참여당 광주시당과 광주시민광장이 후원한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유 원장은 조선대 강연 뒤 광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향후 정치 전망과 야권연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만찬을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남경필 "한·미 FTA비준안 철회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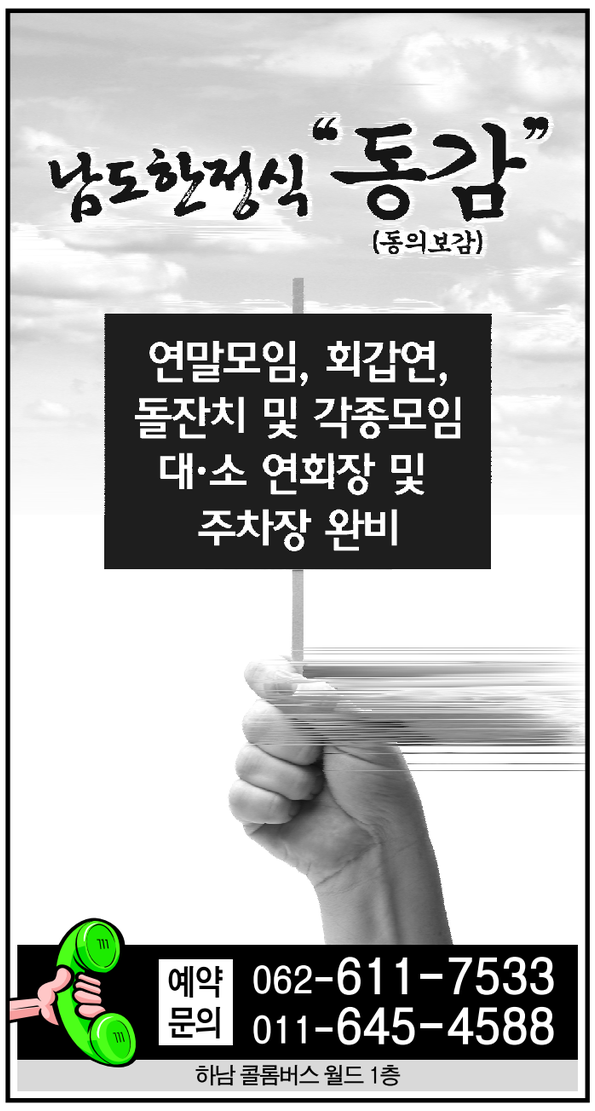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에 대한 국회 심의와 관련, "정부는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 한미FTA 비준안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법제처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번에 한미 간 추가협상안을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기존 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재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추가 합의서'만 따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데 대한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와는 다르게 국회 비준안에 대한 수정권이 없다"면서 "한미 FTA 비준은 추가협상까지 한 만큼 절차와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정부 방침대로 분리 처리를 할 경우 국회가 배기량 3000cc 이하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내용의 기존 협정안을 처리하고, 이어 4년 뒤 관세 일괄 철폐를 담은 재협상안을 처리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며 "정부는 당당하게 국회에 새 협정문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또 향후 심의 절차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 국회가 FTA 비준을 위한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미 의회 심의 절차를 보면서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